“尹대통령, 주변 대형사고 치기 전 특감 임명해야”

우상호 “輿비대위 전환 관여했다면 심각한 정치퇴행”
“국정 기조 바꿔야…前대통령 포토라인 망상 버려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직접 관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정치퇴행에 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 전환과정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대통실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는 질문에 “오랫동안 대통령이 정당에 깊이 관여한 것이 과거의 나쁜 선례이고, 대한민국 정당정치는 이런 폐해를 극복해온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할 책임도 있는데,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직할 통치하면 국회가 사실상 거수기가 돼 버린다”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협의라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며 “대통령이 당무나 인사,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저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완전히 극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 쇄신책이 필요하다”며 “당도 비대위로 가는 마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각의 총사퇴는 지금의 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이 보좌에 실패했다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며 사람만 바꾸는 인적 개편은 큰 효과가 없다”며 “권력기관 장악, 정치보복 수사, 신북풍몰이 등은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쪽이 수사나 보복 행위를 중단하면 저희도 굳이 법적 쟁송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그만둘 생각을 안 하니 ‘전 정부 때 일을 수사하거면 현 정부 때 일도 수사하라’는 식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 위원장은 무속인으로 알려진 ‘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조사까지 들어갈 정도면 이건 이미 시작된 일”이라며 “아무런 관련 첩보도 없이 대통령실이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올 리 있느냐”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법사’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의 관저 공사 시공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인 국가로 전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 정권 후반기에나 나타날 법한 일들이 임기 80여일 만에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붕괴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학문적 양심을 짓밟은 비겁한 자세”라며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 표절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다뤄야 할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자기 표절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야말로 표절공화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한심한 일”이라며 “박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도 객관적 기관에서 다시 검증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검찰 고발 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들에 관여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 주겠다는 망상을 접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장의 대면 보고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 심상치 않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해명을 들어보고 당 차원의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용진 “李, 혁신 없이 ‘남탓’ 노선”…李 “침소봉대 말라”

첫 토론회서 李에 공세 쏠려…강훈식 “의원 욕하는 플랫폼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기호 순)가 첫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의 저소득층 관련 발언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박 후보는 이 후보가 ‘남탓 노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강 후보는 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된 이 후보의 ‘의원 욕하는 플랫폼’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평가받는 이 후보는 이 같은 공세를 방어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李 물고 늘어진 朴…“저소득층 폄하 아닌가” vs “전체 맥락을 살펴라”

가장 먼저 주도권 토론에 나선 박 후보는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이다’고 한 이 후보의 지난달 29일 발언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박 후보는 “혁신하지 않은 채 실패와 패배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남탓 노선’으로 가면 다시는 승리할 수 없다”며 “저학력·저소득층을 폄하하고 그분들의 잘못을 규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예비경선 단계에서부터 지속했던 ‘1위 때리기’ 전략이었다.

이 후보는 “말에 맥락이라는 게 있는 만큼 전체 취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며 “대기업 법인세를 깎고 서민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쉽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침소봉대하지 말고, 오해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를 향해 ‘셀프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 갔다.

박지현 당시 공동비대위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인천 계양을 공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까지 엮어 “박 전 위원장에게 전화한 적 있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울러 “사당화가 될까봐 두렵다”고도 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공략한 것이다.

이 후보는 “여러 의견을 나눈 것은 맞지만, 제가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 게 아니니 그것을 ‘셀프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이 후보를 향한 공격에 강 후보도 가세했다.

강 후보는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하자’는 이 후보의 발언을 평가해 달라는 박 후보의 요청에 “적절하지 않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李 “통합하는 당” 朴 “이기는 민주당” 姜 “젊은 수권정당”

당 대표에 당선된 후 각자가 그리는 민주당의 청사진도 조금씩 결이 달랐다.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경선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이 대립하는 후유증을 봉합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해지려면 정치와 민주당이 바로 서야 한다”며 “미래 비전이 뚜렷하고, 유능하고, 강하고, 혁신하고,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반면 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제기되는 대선·지선 패배 책임론을 겨냥했다.

박 후보는 “광주에서 당선되면 부산, 대구, 강원 험지에서도 당선되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민심과 상식, 포용의 정당, 사회 연대정당으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두 후보 간 신경전을 동시에 비판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후보는 “‘유력 후보가 되면 당이 분열되지 않을까’, ‘(유력 후보에) 강하게 반대하는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중요한 가치 자산을 깨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해결책은 새판 짜기, 젊은 수권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尹 정권 비판에는 ‘한목소리’

각종 이슈를 두고 대립하던 후보들도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세 후보 모두 잇따른 선거 패배로 실의에 빠진 당을 정비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정부, 지자체와 ‘덩어리 규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규제혁신 특별전담반(이하 전담반)을 꾸리고 규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대시설과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 및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또 전담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규제 40건을 개선한다.

과도한 도로점용료 과금, 공장 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 적용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수 개선사례는 정기 전담반 회의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與 상임전국위 내일·전국위 9일 개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5일, 9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최)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급적 8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